

‘패스트트랙 정국’...검찰개혁 충돌 예고

여야, 오늘 원내대표 등 참여 ‘2+2+2 회동 본격 협상’ 민주 “핵심은 공수처”...한국 “장기집권 사령부 불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조국 정국’이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놓고 16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나선다.

그러나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의 원점 논의를 주장하고, 바른미래당은 ‘검찰개혁 법안이 아닌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선(先)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나아가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지목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

처)를 놓고 여야 간 찬반이 극명히 엇갈려 검찰개혁 법안의 여야 대치 국면은 심화할 전망이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각 원내대표가 지정한 1명이 참여하는 ‘2+2+2’ 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전날 회동에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 중 검찰개혁 법안이 먼저 논의될 전망이다.

2+2+2 회동의 주요 의제는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 2건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

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으로, 여야는 처리 시기, 법안 내용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일 전망이다.

우선 처리 시기와 관련, 민주당은 10월 29일부터 본회의에서 상정과 표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법제사법위 소관이기 때문에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별도 기간(90일)이 불필요하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문희상 국회의장도 같은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지난 4월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지정할 것부터 원천무효라는 입장이다. 나아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날짜 계산에서도 한국당은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하다는 게 국회법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여야 4당이 합의한 대로 선거법 개정안

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선(先)처리’ 제안에 반발하고 있다.

법안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수처 설치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당장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로 공수처 법안을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전날 발언을 직접 언급하면서 “극단적 오만이자 명백한 검찰 개혁 가이드라인”이라면서 “검찰 개혁 핵심 조치는 공수처”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장기집권 사령부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자체는 전성이지만 구성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여성정 및 조국심판’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 밝은 표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여성정 및 조국심판’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에 밝은 표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황주홍 “양봉 포함 임업직불제 서둘러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14일 열린 산림청 국감에서 똑같은 농산물을 논·밭에서 재배하면 직불금 지급 대상이지만, 산(임야)에서 재배하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인정되지 않는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산림청에 촉구했다.

임야는 그 규모가 전 국토의 63.5%(637만ha)로 매우 넓고, 쾌적한 자연환경의 제공과 함께, 공기정화, 토사유출방지 등의 역할을 하는 등 공익적 가치가 126조원에 이르는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89조원)보다도 훨씬 크다.

반면 전체 산림의 25%인 157만ha가



공익용 산지로 국가에 의해 지정됐고, 국가의 필요에 의해 주인이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매년 세금을 납부하지만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황 위원장은 “다양한 직불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농업에 비해 임업분야에는 직불금 제도가 미비하다”면서 “농업과 임업 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산림청은 임업분야에도 양봉을 포함한 임업 직불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장병완 “전두환 자택” 공매처분 완료해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중단된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철저히 대비해 징수를 완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부위원회 장병완 의원(대안신당, 광주 동남갑)은 15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전두환 자택 공매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진행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본인과 가족이 2차례에 걸쳐 연회동 집을 헐날까봐도 밝힌 만큼 흔들림 없이 몰수 절차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5공 비리와 광주학살을 주도한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2천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던 전두환은 30년이 넘는 지금까지 1천억원이 넘는 추징금 납부



를 회피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검찰청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특별법’의 의뢰로 전두환 전 회동 자택 공매를 진행했으나 낙찰 직전 전두환 부인 이순자 등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수용해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장 의원은 지난 2005년 ‘공무원 범죄몰수법’ 제정된 이후 2006년부터 자산관리공사가 관련 사무를 수행해 오면서 법원이 몰수대상자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두환 연회동 자택이 첫 사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진수기자

조국 바통은 누가...전해철·김오수·하태훈 물망

검찰개혁 역랑·청문회 돌파 초점...향후 국정운영 큰 변수될 듯

청와대가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리를 이어받을 후임 인선 준비에 착수했다.

이러바 ‘조국 정국’이 불러온 충격과 가상했던 만큼 청와대로서는 다음 장관을 찾는 작업에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다음 법무부 수장으로 누구를 택하느냐가 향후 국정 운영 동력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에서 “검찰개혁에 끝까지 매

진하겠다”고 천명한 점을 고려하면, 조 전 장관에 이어 강력하게 개혁작업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가 후임 장관의 필수 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정문 정국을 잡을 것이 돌파할 후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고민은 한층 깊어지는 양상이다.

정치권에서는 현직 국회의원 가운데 발탁할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흘러 나온다.

현직 의원의 경우 검찰개혁 국면을 돌

파할 ‘뗏집’을 갖겠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의원 불패’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청문회를 돌파하는 데 유리하다는 인식이 번져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과거 민정수석 경험을 갖춘 전해철 의원의 입각을 점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저는 국회에 있기로 했다”는 언급을 했다.

여당에서는 이와 함께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이 물망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출신 중에는 현재 대행을 맡은 김오수 차관의 승진 가능성이 거론된다. 조 전 장관 사태로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수습하고 조직을 안정시키는 책임자라는 평가도 뒤따르고 있다. 봉육 전 대검 차장이 발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시민사회·학계 출신 중에서도 검찰 개혁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 온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이름이 오르 내린다.

청와대에서는 이런 후임 하마평에 대해서는 “너무 이른 얘기다.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긋는 분위기다.

/연합뉴스

이개호 “실감 콘텐츠산업 3대 편중 심각”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V R(가상현실)·AR(증강현실) 등 ‘실감 콘텐츠산업’을 실질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수도권 편중, 엔터테인먼트 분야 편중, 소프트웨어 편중 등 ‘3대 편중 현상’ 극복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5일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실감 콘텐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각종 국가지원의 수도권 편중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에 편중된 개발 시장 ▲콘텐츠 제작기기(機器) 등 하드웨어를 외면한 소프트웨어 편중 등 ‘3대 편중 현상’ 극복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NIPA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2018년 구축된 7개 거점센터 상용화·사업화 성



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육성된 기업 128개 중 54개가 서울지역으로 42.1%를 차지하고 있고 ▲매출액도 71억원 중 36.6%인 26억원을 서울에서 차지, 서울 집중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감콘텐츠산업 지원의 수도권 편중과 함께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편중현상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실감콘텐츠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안전, 국방, 의료, 교육, 출산·육아 등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실감콘텐츠를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특화모델 발굴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수기자

오천경매

전국임야
삽니다
당일처리. 010-6834-7400

경매투자자

[빌딩]

- 광주역앞 대지840㎡ 건2,000㎡ 승강기2대 주차20대 급매24억3,000(보1억5,000월1,600가)
- 서석동 2차선도로변 최고요지 대지337㎡ 단층건물점포5칸 급매20억 추상복합 최적
- 첨단신도시 먹자통 최고요지 2015년준공 대지660㎡ 연면적1,600㎡ 급매26억5,000(보1억7,000월1,300포함)
- 임동 전남방직인접 2차선도로접대283㎡ 3층건물 급매6억1,000(시세70%)

[토지]

- 장흥 바다인접 2차선도로접 농장 102,000㎡ 급매6억(시세50%)
- 빛그린산단 인접 계획관리30,000㎡ 3.3㎡당12만원 산단배후 다용도 토지
- 남구 덕남동 빛고를 노인 건강타운 인근 농장 45,000㎡ 주택 참고있음 도로있음 급매16억

*****상가빌딩, 모텔, 가든, 나대지 지방, 섬땅등 투자 손님 다수 대기중입니다 연락주시면 바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금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등운고가입구

오천경매 010-3605-5000

CMYK